

한국해양연구원 부산 이전 반대 건의안

(김정택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 번호 | 2185 |
|----------|------|

발의년월일 : 2011. 11. 1.

발 의 자 : 김정택 · 김기완 · 김동규 ·
김영철 · 김철진 · 나정숙 ·
박은경 · 성준모 · 송두영 ·
신성철 · 윤미라 · 윤태천 ·
이민근 · 이형근 · 전준호 ·
정승현 · 정진교 · 황효진
의원(18인)

1. 주 문

- 정부는 지난 2005년 6월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지방 이전계획’을 수립, 수도권 소재 정부투자 및 출연기관인 한국해양연구원 안산 본원을 부산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는 바,
- 1986년 설립된 해양연구원은 그동안 국내 해양연구발전을 위해 서해 안산, 동해 울진, 남해 거제, 내륙 대전 등 4곳에 설치되어 해양과학 연구와 성과 보급에 주력해 왔으며, 특히, 반월산단을 기반으로 태동한 우리시는 산·학·연 클러스터를 조성해 해양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활동을 유지해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전은 재검토되어야하고 불가피하다면 분원 형태로라도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함.

2. 제안이유

- 한국해양연구원 안산 본원은 서해안 권역 해양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것으로 해양연구원이 이전하게 되면 첨단산업, 서해 권역의 해양기술 발전 등을 위해 설립된 ‘안산사이언스밸리’의 입지도 크게 흔들릴 전망이다. 안산사이언스밸리에는 현재 관련 분야 전문인력 4천200여명과 200여개 기업에 2천500여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시화호 수질개선사업과 화옹호 사업, 새만금사업, 황해 해양조사 및 해저자원 개발 등 서해안권역의 해양연구 차질이 불가피하며, 그동안 일선학교를 중심으로 진행해온 해양과학에 대한 교육기능도 사라지게 되는 등 이전으로 발생하는 각종 현안사항들을 검토한다면 해양연구원 안산본원은 존치되어야 하고, 이전이 불가피하다면 분원 형태라도 조치하여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함.

한국해양연구원 부산 이전 반대 건의안

안산시의회 의원 일동은 76만 안산시민과 함께 정부가 지역 균형발전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안산 해양연구원 부산 이전을 강력히 반대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한국해양연구원 안산 본원은 지난 1986년부터 현재까지 연안통합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시화호 종합관리계획 수립, 시화호 해양환경 개선 사업 등을 추진해오고 있다. 또한 254MW급의 세계 최대 조력 발전소인 안산 시화호 조력발전소를 가동시키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여 왔으며 앞으로 시화호 조력에너지 실용화사업에도 큰 역할이 기대되는 상황에서 해양연구원 안산 본원 부산 이전은 안산시민으로 하여금 실망 이상의 분노를 느끼게끔 한다.

우리는 지난 30여 년간 우리나라 대표적인 중소기업 집적단지인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과 함께 성장해오면서 죽은 시화호, 공단악취, 환경오염 등 산단의 부정적 부산물인 환경오염도시라는 오명도 감내하면서 국가 경제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해오고 있다.

굳이 우리시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아니더라도 중국의 성장세를 볼 때 서해안의 중요성은 간과할 수 없는 현실이고, 또한 산단이 존재하는 한 공장시설에서 배출되는 해양오염에 대한 모니터링, 지진 등 해양재해 예방시스템 구축, 작게는 일선 학교를 대상으로 해 온 해양 과학 교육기능도 사라지게 되는 등 이전으로 발생하는 현안사항과 천문학적인 이전비용 등을 생각할 때 이전 문제는 장기적 안목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

하나, 해양연구원 안산 본원 이전과 동시에 서해연구의 거점기반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이는 엄청난 손실로 현재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고 있는 시화호 조력발전소의 해양에너지 실용화 사업 등에도 차질이 우려되며 또한 안산사이언스벨리와 연계한 각종 연구·개발 사업은 물론 시화호 수질개선사업, 새만금사업 등 서해안 권역 해양연구의 차질이 불가피해 향후 서해연구소 추가 설립이라는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나, 우수인재들의 대거 이탈과 연구의 장애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해양연구원에는 650여명의 우수인력들이 근무하고 있으며 잔류없이 이전할 시에는 우수인력의 이탈은 불가피할 것이다. 또한 현 부지를 매각해 이전비용을 충당한다 해도 적어도 5,300억원의 엄청난 비용이 들게 되며, 무엇보다 잠시도 멈추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 이공계 연구시설·장비 및 연구시스템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이유로 연구시설의 단순 이전은 미래 해양산업의 발전을 중단하는 우를 범하게 될 것이다.

하나, 해양연구소는 이미 지역간 균형 배치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서해(안산 본원), 동해(울진), 남해(거제도), 내륙(대전) 등에 분원을 설치해 이들을 중심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3면의 바다를 권역별로 담당케 하여 정부의 지방이전 방침 훨씬 이전부터 균형발전을 해 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해양연구원이 지방으로 이전되면 오히려 또 다른 불균형을 초래하는 일이 될 것이다.

이에 안산시의회는 시와 시민단체들과 함께 해양연구소 이전 반대 운동을 더욱 확산해 나갈 것을 천명하며, 아울러 이전 백지화가 불가하다면 분원형태로라도 남아 서해에 대한 연구기능이 존치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2011. 11. .

안산시의회의원 일동